

이 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류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금융·재정 지원 속도감 있게… 기존 예산으로 부족할 것”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유류세 인하·취약계층 직접 지원 지시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 엄중 제재… 회사 망하는 수 있을 것”
국가정상화위원회 제안도… “개혁 붙여 저항 유발할 필요 있다”

이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국제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10% 더해주든지 직접 지원을 늘리든지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어려움 겪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사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정 담합행위,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피해를 주면 엄청난 과징금에 10%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실제 앞으로 회사 망하는 수가 있다.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는 부정행위로 돈 번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대외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는 과건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번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전세기 추가 투입이 필요해서 필요한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전세사기 근절 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선 주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를 포함해 부처별 정상화 과제를 총괄하는 ‘국가정상화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비정상적 정

상화 사업을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별로 뽑아서 종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정상화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개혁과제라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 저항감을 굳이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한다.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되는 것

이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복유립의 경우 남성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안 쓰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이 60% 늘어도 전체로 보면 20%도 안 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들 선거제 “개혁으로 정치 다양성 보장”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한 민주당은 당내 반발과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합당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뤘다. 대신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는 사실상 선거 전까지는 각자의 길을 가되 후보 단일화 등 실리를 챙기겠다는 포석이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예비후보자들이 9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의제를 전면내내세웠다.

혁신당 광주시당 예비후보자 7인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시민 표의 상당수를 사표로 만든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위기가 자 기회로 할당 논의에 매몰되어 희석되었던 ‘제3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다시 세우야 하며, 호남 지역에서는 독자 후보를 내어 민주당과 경쟁하고, 수도권 등 승부처에서는 연대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독자 생존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선거 이후 통합 협상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관건이 될 것 같다.

특히, 광주 광산구 가선거구 (광산구의회 의원 선거)는 조국혁신당이 광주에서 내세우는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의 기수로서, 지역 내 새로운 정치 대안인 농촌 지역(동곡, 평동, 삼도, 분량)과 구도심(송정 1,2, 도산, 어룡동)이 섞여 있어 지역 민원



9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촉구 하고 있다. 박철웅(기초의원·광산마 선거구), 김훈중(기초의원·서구라 선거구), 선동주(시의원·북구5 선거구), 윤성미(기초의원·광산가 선거구), 노윤섭(기초의원·서구가 선거구), 김옥수(기초의원·서구라 선거구), 강대호(기초의원·광산나 선거구) 예비후보

해결 능력이 중요하며, 가선거구는 구의원 3명을 뽑는 ‘3인 선거구’로. 보통 민주당에서 3명의 후보를 모두 내어 싸움이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광산구 가선거구는 3위 안에만 들면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한 명을 제외하고 ‘3당’ 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지가 이번 광산구 선거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만약 조국혁신당 후보가 광산구 가선거구에서 당선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초의원 1석 확보 이상의 의미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호남의 공식을 깨는 사건이 될 것이다. /김준행 기자

전남도,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속도 4월까지 기본구상안 수립… 정부 개최도시 공모 대응

전라남도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 시가 향후 정부의 G20 개최도시 공모에 대비한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기본구상안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1일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글로벌 도약 전략의 하나로 ‘2028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공식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남·광주는 ▲민주주의를 옹호로 실현해온 도시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대전환의 실제 해법을 보여 줄 수 있는 도시 ▲AI 첨단기술로 도약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도시라는 점 등을 내세워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단일 도시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거점 도시를 잇는 ‘연대·분산형 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광수 기자

광주권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 외교 공간을 조성한다. 동부권은 2026 여수세계박람회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과정에서 구축된 숙박·관광 인프라를 활용한다. 서부권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회의 공간으로 구성해 권역별 거점을 하나의 회의 네트워크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착수하는 G20 유치 기본구상안에는 ▲전남·광주의 도시 여건과 강점 ▲전남·광주의 G20 유치 기본전략 및 실행계획 ▲차별성 있는 개최 방식 ▲주요 콘셉트와 핵심 메시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남도는 4월까지 기본구상안 수립을 완료한 뒤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의 G20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광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주최 |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영암문화관광재단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26 영암 왕인문화축제

4.4.토 - 4.12.일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일원

위대한 항해